

공 개



의안번호	제 111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3. 17. (제 5 차)

의
결
사
항

농협은행(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3. 17.

1. 의결주문

농협은행(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2018.11.19.~2018.12.14. 기간 중 농협은행(주)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은행법」에서 정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과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선불카드 약관 제정시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32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2.17.) 심의필

<별지>

농협은행(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5억 8,4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은행법」에서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위반하여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입금처리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34조2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제5의2호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호, 제31조, [별표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 직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80만원*~2,5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조치대상자	지적사항	조치내용
♡♡♡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과태료 2,500만원
▲▲▲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과태료 180만원
○○○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과태료 2,430만원
■ ■ ■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과태료 560만원
◎◎◎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과태료 180만원
●●●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과태료 750만원

- 조치 사유 : 「은행법」에서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위반하여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입금처리

- 법적 근거

- (舊) 「은행법」 제34조2 제1항 제1호, 제69조 제4항 제2의2호
- (舊)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호, 제31조, [별표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나. 선불카드 약관 제정시 보고의무 불이행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2,88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약관 제정시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선불카드 약관 제정시 보고기간인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함

- 법적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72조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22,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다.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2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은행법」에서 정한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해 5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시하지 아니함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35조의3 제5항, 제6항, 제69조 제1항 제7호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3항, 제4항, 제5항, 제31조, [별표4]
 -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5 제4항, 제5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2. 조치사유

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농협은행(주)(♣♣♣지부 ♠♠ ♡♡♡ 등 7명)은 2016.8.2.~2018.3.6. 기간 중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전산 조작 당일 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된 이후 다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106건, 합계 금 370,033천원을 입금 처리하였고
 - 농협은행(주)(♣♣♣출장소 ♠♠ ♡♡♡ 등 2명)은 2017.2.15.~10.23. 기간 중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6건, 합계 금 16,298천원을 입금 처리하였음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직원명	부서 (현부서)	직급 (현직급)	시작일	종료일	건수 ¹⁾ (횟수)	금액	개인 과태료 ²⁾	내역
1	♡♡♡	♣♣♣지부 (&&영업부)	차장 (팀장)	2016.8.2	2017.3.15	43(56)	126,103	○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결제일에 상환여력 부족 으로 무자원 선입금
2	☐☐☐☐	@@@@지점 (퇴직)	과장 (퇴직)	2016.8.30	2017.2.28	11(19)	13,671	면제 ³⁾	
3	●○○○	***지점 (퇴직)	과장대리 (퇴직)	2016.8.12	2017.2.14	5(6)	15,820	면제 ³⁾	
				2017.5.12	2017.7.12	3(6)	20,500		
4	▲▲▲	▽▽▽지점 (☆☆☆지부)	차장 (상동)	2016.8.29	2016.8.29	1(1)	841	○	
5	○○○	●●●●출장소 (###지부)	팀장 (상동)	2016.10.5	2017.4.17	13(26)	49,581	○	
				2017.4.27	2017.6.23	3(10)	8,088		
6	■ ■ ■ ■	♠♠♠지부 (△△△△지점)	계장보 (상동)	2016.8.29	2016.9.30	3(6)	11,524	○	외 환 거 래 를 위해 무자원 선입금
				2017.5.4	2018.1.5	11(19)	87,743		
7	●○○○	♣♣♣출장소 (◆◆◆◆◆ 금융센터)	팀장 (상동)	2017.9.21	2017.9.21	1(1)	3,000		
	○○○○	♣♣♣출장소	계장	2017.2.15	2017.2.15	1(1)	300	○	

		(□□□□본부)	(상동)	2017.5.10.	2017.10.23	4(4)	12,998		
8	●●●	♥♥♥♥♥♥♥♥ ♥♥ (상동)	과장대리 (상동)	2016.8.5.	2017.4.6.	4(15)	17,861	○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결제일에 상환여력 부족 등으로 무자원 선입금
				2017.5.12	2018.3.6.	9(24)	18,301		
합 계						112(194)	386,331		

- 1) 2건 이상의 동일한 무자원 선입금 행위를 반복하였으나 동일 날짜에 여러번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간적(당일 마감 전 발생), 장소적(동일 지점 등) 근접성을 고려하여 1건으로 산정
- 2) 2017.4.17. 이전의 위반행위는 개인 과태료 부과대상(舊「은행법」 제69조제4항제2의2호)
- 3) 目前 과장, 前 과장대리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기준 5. (1), (2)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실효성이 없거나(파산선고 및 면책, 개인회생절차개시) 면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 관계 법규 >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9조(과태료)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나. 선불카드 약관 제정시 보고의무 불이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부가 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겸영여신업자)은 2012.6.4.~2017.11.20. 기간중 ▽▽▽▽▽▽▽ 등과 제휴한 여성농업인, 재활치료 등 공공 목적 선불카드 약관 5건을 제정하고도 보고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농협은행 선불카드 약관 미보고 내역

약관명	제정일	보고일*
@@@@@ 행복바우처카드 상품설명서 1부	2012.6.4.	2019.2.20.
\$\$\$\$\$\$\$ 바우처카드 상품설명서 1부	2013.1.2.	2020.10.12.
▽▽▽▽▽▽▽ 문화누리카드 상품설명서 1부	2014.4.24.	2018.11.26.
♣♣♣♣ ◇◇◇ 드림바우처카드 상품설명서 1부	2017.11.20.	2019.7.9.
♥♥♥ 에너지바우처카드 상품설명서 1부	2017.11.20.	2019.6.21.

※ 2012~2014년 제정된 약관 미보고 3건은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72조(과태료)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22(약관의 개정 등), 제26조(과태료),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 「은행법」 제35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 등에 의하면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4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 농협은행(주)은 2016.5.13.~2016.7.21. 기간 중 특수관계인 2인(총 2건)*에 대한 투자금액이 각각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 7 -

** 50억원[자기자본의 1만분의 10('15년말 기준 ###억원)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 2017.\$.\$\$ 공시, 2017.&.&& 보고

- 2016.2분기~2016.4분기 기간중 분기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출자) 현황'을 공시하면서 동 회사들에 대한 출자현황을 포함하지 않았음

< 관계 법규 >

- 「은행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한도 등), 제69조(과태료)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5(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관계 법규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1.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5조의3(대주주가 발생한 지분증권 취득한도 등) ⑤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7.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 舊 「은행법」 (2017.4.18. 시행, 법률 148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舊 「은행법」 (2017.4.18. 시행, 법률 14826호)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삭제<2017.4.18.>

부 칙 <법률 제14826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 제1항·제2항, 제52조의2제1항제3호, 제69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9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법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선발행하는 등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제20조의8(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⑤ 법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은행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규모, 분기 중 보유한 지분증권의 증감액, 보유한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카.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2	3,000
너.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	6,000

□ 舊 「은행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10.19. 시행, 대통령령 제28382호로 개정되기 이전)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차.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2	2,500
카.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4항제2호의2	250
너.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	3,000

□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5(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⑤ 영 제20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함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지분율
3. 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시가
4. 당해분기중 보유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 ②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22(약관의 개정 등) ①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신용카드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개정 전 금융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금융이용자에게 개정된 금융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금융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 법 제54조의3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의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120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2호	1,500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약관의 개정 등) ① 시행령 제19조의2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폐업·휴업·부도·파산 등으로 제휴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2.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에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금융기관점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삭 제 <2017. 10. 19.>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만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div> <div>동기</div> <div>위반결과</div> </div>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삭 제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3) 삭 제
- (4) 삭 제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8) 삭 제
-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舊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7.10.18. 이전)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위 임 사 항	관 계 법 규
8. 신용카드업자등 감독 관련사항 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2항·제3항(신용카드 모집인의 모집질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주)

2. 제재조치일 : 2021. 4.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과태료 6억 2,480만원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 2명▪ 견책 : 2명▪ 주의 : 2명▪ 과태료 60만원~2,500만원 부과 : 8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고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

하기 전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 농협은행(주)(이하 ‘농협은행’)은 2017.3.15. ~ 2018.3.30.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호[채권]’ 등 125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총 4,600명(6,868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 ◆◆◆◆◆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66개 펀드(3,215억원)와 ■■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59개 펀드(3,653억원)

- 동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청약을 권유하였음

* 2020.6.24. 금융위원회는 본 건 펀드가 모집 대상임을 전제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발행인인 ■■자산운용(주) 및 ◆◆◆◆◆자산운용(주)와 주선인인 농협은행(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2) 고객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농협은행 WM연금부는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호’ 등 한 종목의 채권만을 편입한 총 140개 펀드의 판매를 위해 설명자료를 판매직원에게 제공*하면서

* 판매직원 내부 교육용으로 은행내 게시판에 게시

- 해당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만기가 해당 펀드의 만기보다 늦게 도래한다는 사실 및 이에 따라 펀드 만기일에 채권이 시장에서 매도되지 않을 경우 펀드 상환이 되지 않을 위험 등을 누락함에 따라

* 단일 종목의 채권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서 펀드만기일과 채권만기일의 일치 여부는 해당 펀드의 본질을 이루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과 펀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임

- 2016.7.15.~2017.10.17. 기간 중 상기 140개의 펀드(4,584건, 총 7,192 억원)*의 투자 권유 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이중 ▲▲▲▲▲채권이 편입된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호’ 등 12개 펀드(413건, 589억원)의 경우 펀드만기일에 동 채권이 매각되지 않음에 따라 &&&~&&&일 환매가 지연되어 %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음(펀드의 채권만기일(◆◆◆◆◆ 2018.12.5., ■■ 2018.11.19.)에 채권이 상환되어 펀드도 전액 상환되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47조

(3)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농협은행(주)(☼☼☼지부 ♡♡♡ 등 7명)은 2016.8.2.~2018.3.6. 기간 중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전산 조작 당일 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된 이후 다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106건, 합계 금 370,033천원을 입금 처리하였고

- 농협은행(주)(♣♣♣♣출장소 ♠♠ ♥♥♥ 등 2명)은 2017.2.15. ~ 10.23. 기간 중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6건, 합계 금 16,298천원을 입금 처리하였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34조의2
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4)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 등 2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7.9.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카드 이용실적 50만원에 1만원, 100만원에 2만원, 200만원에 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권유하였음

- (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7.11.23.~2018.1.31.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건당 10만원~12만7천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나.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선불카드 약관 제정시 보고의무 불이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하려는 경우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주)(경영여신업자)은 2012.6.4.~2017.11.20. 기간 중 ▽▽▽▽ ▽▽▽ 등과 제휴한 여성농업인, 재활치료 등 공공 목적 선불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약관 5건을 제정하고도 기간 내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

(2)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 「은행법」 제35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 등에 의하면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4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득한 지분증권의 규모·증감액·취득가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규모, 분기 중 보유한 지분증권의 증감액, 보유한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주)은 2016.5.13.~2016.7.21. 기간 중 특수관계인 2인(총 2건)*에 대한 투자금액이 각각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 ‘♣♣-♠♠♠♠♠♠♠♠♠♠♠♠♠♠@@@사모투자전문회사’ 1건(86.2억원, '16.5.13.),
‘♣♣-♡♡♡♠♠♠♠♠♠♠♠♠♠♠♠♠♠사모투자전문회사’ 1건(74.8억원, '16.7.21.)

** 50억원[자기자본의 1만분의 10('15년말 기준 ###억원)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 2017.\$.\$\$. 공시, 2017.&.&&. 보고

- 2016.2분기~2016.4분기 기간중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출자)현황’을 공시하면서 동 회사들에 대한 출자현황을 포함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35조의3
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
3.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5

다. 자율처리필요사항

(1) 자금목적 등 여신심사 불철저

□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운용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의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 농협은행 ●●● 지점은 2017.5.29. 임대사업자인 차주 ▲▲▲에게 운전자금 용도로 개인사업자대출(“어깨동무론”) @@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중 %%억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시설자금 용도인 ♡♡ ◆◆◆구 소재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자금 용도로 대출을 취급하여 차주의 차입목적에 맞는 적정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소요자금 심사시 기재한 소요한도산정표에 소요자금 용도가 기존여신상환 \$,\$\$\$,\$\$\$,\$\$\$원 및 임대 목적의 타부동산 구입자금 #,###,###,###원으로 기재

되어 있고, 자금용도 사후점검시 아파트 매매계약을 징구하여 운전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 가능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중소금융과	특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76 02-2100-2992	02-3145-7205